

김정은 체제 본질 일깨운 현정은 회장 방북 거부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2003년 1월 임동원 특보를 평양에 파견했다.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미·북 관계 악화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쓴 친서도 쥐여 보냈다. DJ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친분을 쌓아온 김정일이 자신의 마지막 특사를 만나 줄 것으로 생각했으니 오산이었다. 김정일은 임 특보가 사흘 동안 평양에 머물렀음에도 '지방 현지 지도'를 핑계 대고 만나지 않았다.

DJ는 크게 분노했다. 김정일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DJ는 이때의 상황을 자서전에 남겼다. "나는 크게 실망했다. 임기 말 나를 대신해 찾아간 특사를 만나 주지도 않은 것에 화가 났다." 1356쪽의 두 권짜리 DJ 자서전 중에서 김정일을 겨냥해 실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DJ 임기가 끝나가면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 김정일이 바로 관계를 끊은 것"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자신을 확대해 준 문재인 대통령이게 감사를 표했다. "하나의 핏줄과 역

사, 문화와 언어를 가진 북·남은 본래처럼 하나가 돼 끊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이듬해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그러자 그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질 비방을 늘어놓았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웃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 "삶은 소대거리도 양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걷어차는 김씨 일가의 본질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망 20주

현대그룹에서 2조원 등 쟁기고 정몽헌 20주기 추모 방북 막아 전략 차원에서 활용 가치 없어지면 가치없이 버리는 북에 환상 깨야

기를 앞두고 다시 확인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다음 달 4일 남편 정 회장의 20주기 추도식을 금강산에서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방북 요청을 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북한 외무성이 나서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고 해 자리를 막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에 관여해 온 아·태 평화위, 조평통이 아니라 외무성을 동원해 "검토해 볼 의향도 없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현 회장은 2018년엔 정 회장 15주 때 방북, 금강산에서 추도식을 하고 돌아왔다. 당시 북 관계자를 통해 김정은

의 "(정 회장) 추모 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전언도 받았다.

하지만, 핵·미사일 첨단화에 성공한 김정은이 대결 태세로 전환하면서 북한과 특수 관계였던 현대그룹의 현 회장이 도한날 '그 어떤 인사'로 격하됐다. 현대와 맺은 관계에 종언(終焉)을 고했다고도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1998년 정주영 회장의 1001마리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현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증언한 대기근과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때 현대가 4억5000만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에 비밀리에 송금, 조들렸던 김씨 일가의 숨통을 틔워줬다.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현대아산은 대북 투자 명목으로 최소한 15억달러를 썼다. 요즘 환율로 환산하면 약 2조원의 거액이다.

현대아산은 북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射殺),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대북 사업이 정지돼 명맥만 겨우 잇고 있는데 북한은 인도주의 차원의 추도식도 불허했다. 현대가 25년에 걸쳐서 북한에 이용당하다가 '팽' 당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대처럼 김씨 일가에 초대형 사기를 당하는 기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북한 지원부'로 비판받는 통일부가 환골탈태를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일지도 모른다.

김준의 맛과 섬 [145]

제주 잔치음식 괴기반

제주 비양도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이름하여 '잠수복 벗고 면사포'라는 섬마을 잔치였다. 해녀 10명이 면사포를 쓰고 사진을 찍고 축하 잔치를 하는 내용이었다. 시차는 80세 현역 해녀 할망의 "우리 때는 드레스가 없어, 비양도에는 결혼식장도 없잖아. 마당에 보릿대 깔고 병풍 치고 결혼했어. 그래서 드레스를 못 입었어. 결혼식 사진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 영감이 있으면 드레스 한번 입고 같이 결혼 사진 찍고 싶어"라는 이야기였다.

비양도에는 해녀 4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중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20여 명쯤 된다. 섬은 작고 고구마를 심어 식량을 할 땅도 손바닥만 하지만 바다밭은 넓었다. 그래서 생계를 오롯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는

갯물질(해안가에서 하는 물질)로, 상군이 되어서는 뱃물질(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물질)로 더 많은 소리를 쭈고 미역을 뜯어야 했다. 그래서 면사포는 그 사하고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해녀 할망이 특 던진 말이 잔잔하게 물으로 퍼져 나갔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강화에서 신안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었다. 면사포를 가져와 사진을 찍어 주겠다는 회사도 있었다. 그리고 농사꾼은 쌀을, 소금 장인은 천일염을, 손재주가 좋은 분은 한과를 만들어 보냈었다. 이들에게 제주 음식 연구가 양용진 셰프가 묵묵, 잡채, 문어무침 그리고 괴기반 등 제주 잔치 음식을 차려냈다. 묵묵은 제주 참돔(모



자반)에 돼지고기 육수로 준비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묵묵과 함께 나온 '괴기반'이었다. 괴기반은 두부 한 점, 수애(순대) 한 점, 그리고 수육 세 점이 담긴 음식을 말한다. 수애는 긴 잔치에 상하지 않도록 채소는 빼고 메밀가루와 선지를 넣어 떡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묵묵과 곁들여 먹었다. 괴기반은 1인용 상에 해당한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남자가든 여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똑같은 상을 받는다. 제주 음식에 깃든 평등 정신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IAEA '안전' 평가 지켜지는지 후쿠시마 방사능 감시 계속해야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일본 정부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예정대로 수일 내 방류 시설 검사 합격증을 발부하면 방류를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끝난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예고해 왔다. IAEA 사무총장은 7일 한국에 와 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에도 설명할 예정이다.

2011년 동일본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바다 유출 방사능 가운데 가장 위험한 세슘137 총량은 현재 후쿠시마 보관 탱크에 저장된 방사능 양의 2만~3만배에 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것이 바다로 쏟아졌다. 그런데도 그후 7만 건이 넘는 우리 바다의 수산물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났다. 따라서 그 2만~3만분의 1에 불과한 현재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30년간 서서히 방류한다면 한국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평가와 국민의 주관적 불안은 갈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해양·수산물) 오염을 걱정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바다물과 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일 "IAEA 보고서 내용과 관련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

까지 10년이든 10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근해 바닷물과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을 망라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해야 한다.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 후쿠시마 방류는 30년 지속된다. 일본으로부터 방류 과정과 방사능 현황에 관한 상세 자료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류 시설과 고장 시 대처 시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민주당은 "IAEA 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해온 만큼, 방류 반대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광우병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고,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사태를 경험한 국민도 과학적 설명과 고담성 선동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 기술로 제조한 상품을 전 세계에 팔아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원자력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 기구가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등 주요 국가와 협업을 진행해온 평가를 부인하는 것은 잠시 국민 판단을 흐릴 수는 있어도 지속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지금의 국민 평가를 냉정하게 보고 국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우리 수산업계에 어떤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도 직시해야 한다.

불법 천막에 전기까지 대준 지자체, '천막 공화국' 된 원인

서울 시내에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불법 천막이 55동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에 설치한 지 3년이 넘는 것도 여러 개다. 집회 신고를 해도 천막은 불법이다. 그런 불법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노랑진 수산시장 비대위'라는 단체는 동자구 노랑진역 육교 위에 불법 천막 8동을 4일 기준으로 1375일째 세우고 있다. 그동안 동자구정이 몇 차례 철거를 했지만 비대위는 이후 계속 천막을 설치했다고 한다.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무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그나마 나은 경우다. 서울 노원구청 앞에는 '월계인덕대책위'라는 단체가 1336일째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데 구청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나 철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 중에 불법 천막 농성자들에게 구청 전기까지 끊어다 쓸 수 있게 해준 곳도 있다고 한다. 불법 천막 철거 의무가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넘어 불법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불법 천막 시위가 이토록 빈번한 것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천막을 세우면서부터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지원까지 했다. 이 시설을 서울시 의회로 옮기기까지 7년이 걸렸고, 그 사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특하면 불법 천막을 세웠다. 지금도 서울시청 주변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세운 합동 분향소가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헬러윈 참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시위 도중 갑자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웠다. 여의도 국회의원사당 주변에도 불법 천막 15동이 들어서 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기업 주변의 불법 천막 농성도 흔한 풍경이 됐다. 불법을 방치하고 용인하면서 대한민국이 '천막 공화국'이 된 것이다.

행정기관들은 불법 천막 강제 철거 시 불상사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서초구청은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있던 불법 천막을 10년 만에 별 무리 없이 철거했다. 민노총 분신 노조 간부 분향소 천막은 경찰이 막았다. 그동안 불법 천막 철거는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임기 3분의 1 감옥서 보내도 의원 세비 수억 다 받는다니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제3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5개월째 매달 1300만원씩 29억원가량 세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의원실 보좌진 5~6명의 급여까지 합치면 매달 5000만원 안팎 국민 세금이 개인 비리로 감옥 간 의원 뒷바라지에 쓰인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임기 3분의 1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세비 지급은 계속된다. 정 의원뿐이 아니다.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으로 구속돼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5개월가량 세비를 받았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100억원대 코인 의혹으로 보름 넘게 국회를 떠나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의 세비는 다 받아갔다. 김 의원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일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받는 의원은 훨씬 많을 것이다.

구속된 의원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운다. 유죄가 무죄로 뒤집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무죄를 떠나 구속 기간에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이 구속되면 보수규정에 따라 달게는 80%까지 급여가 삭감된다. 국회의원이라고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 근로자들은 이미 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왜 의원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 구속되거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우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은 해묵은 과제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않고 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이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하지만 말뿐이다.



류근일 칼럼
尹독트린 4

문재인, 정곡 찔렸나...슬쩍 나타나 또 "탈냉전·닥치고 평화" 타령

뉴데일리
newdaily.co.kr

반국가세력 존재-정체 깨달았더니... 제 발 저런 듯 너도나도 "파르르"
냉전 사고 버려서 탈냉전 된 것 아냐... '힘의 정치'로 미·소 냉전 부쉬버린 것
"닥치고 평화" 종전선언하면...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문 열릴 것

윤 대통령이 직격탄 날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극좌는 물론 비(非) 좌파 안의 '사쿠라 우파'도 일단 휘청했다. 정곡(正鵠)을 찌른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게 (반)국가 가 아닌 말인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라 간주했는지, 문재인과 그 일당은 논란 닷새 만에 또 다른 조작된 논리를 들고 반격에 나섰다. 바로 그들이 걸맞다면 내세우곤 하는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자" "전쟁이나 평화냐?"란 콧수다.

[기자 3] 문재인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반)국가 발언을 겨냥한 듯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썼다.

그럴싸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동권은 냉전 종식, 평화 운운을 1989년의 소련 붕괴 때 처음 우려먹었다. 미·소가 냉전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도 타는 대결적 사고와 정책을 쓰지 말자는 것이다.
 언뜻 듣기엔 그럴싸하다. 타짜와 끈들의 말은 원래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휘둘린다. 속는 자들이 물론 한심한 중우(衆愚)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말처럼 걸 다르고 속 다른 것도 없다. 그 당시 미·소 냉전은 왜 무너졌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월등한 힘의 우위(優位)로 소련을 군비 경쟁에서 두 손등에 만든 덕이었다. 이 격차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인정하고 스스로 소련 해체, 공산당 시대 종언을 선택했다.
 한 마디로, 대소(對蘇) 힘의 우위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압도적으로 강화했기에 소련이 항복한 것이다. 좌익은 이걸 교묘한 말로 호도해 거두절미한 채 "북한을 향해 냉전을 하지 말라"고만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비해야만 평화가 보장된다.

누가 평화와 해빙(解氷)을 싫어하고 전쟁과 냉전을 좋아하는가? 좌익은 "월가(Wall Street)의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가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을

획책하고, 공산당은 이에 반대하는 평화 세력"이란 거짓 신화를 내건다. 그러면 철부지들이 "와~ 그렇구나" 하고 부화뇌동한다.

반국가 세력의 위장전술
 공산당은 그래서 혁명에 성공할 때까지는 자신들이 극좌 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전체주의 세력임을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 그냥 △ 민주세력 △ 진보세력 △ 민족세력 △ 평화 세력 △ 평등 세력이라고만 일버무린다. 그래서 많은 비(非)공산당 세력들을 자기들에게 동조하게 만든다. 사기다.

△ 긴장 완화 △ 해빙 △ 탈냉전은 무엇보다도 정보 차단과 양립할 수 없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야말로 긴장완화의 가장 으뜸가는 전제다. 사람들의 자유 왕래도 그 전체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한 3대 세습 천황제가 과연 이런 걸 허용할 수 있나?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날이다. 영? 아 왜 대답 안 해? 대답해 보라니까!

북한 하자는 대로 하는 "닥치고 평화"
 북한의 요구대로 ▲ 종전선언을 하고 ▲ 유엔사를 해체하고 ▲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ㅎㅎㅎㅎ.
 북한 핵은 그냥 놓아둔 채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남한에서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착착 진행하면, 그런 북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ㅎㅎㅎㅎ.
 누구 좋아하라고 그래? 관뉘, 안 해! ㅎㅎㅎㅎ.
 누구 좋아하라고 그래? 관뉘, 안 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尹독트린 시리즈>

[尹독트린 ①]
윤대통령의 역사적 연설... [윤석열 독트린]을 내놓다

[尹독트린 ②]
윤대통령에게 '국우'라니... '국(術)'이란 낙인찍기는 주사파에게나 하라

[尹독트린 ③]
윤대통령, 틀린 말 했나? "계를 문" 그들, 마구잡이 할나하고 나선 이유는?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7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38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